

문서번호 총선넷 2016-0017

수 신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2-725-7105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공문]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 및 비례대표 공천 관련 항의서한
날 짜 2016. 3. 23. (총 4쪽)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 및 비례대표 공천 관련 항의서한 전달의 건

.....

1.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2016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6총선넷은 아래와 같이 부적격자에 공천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습니다.
3.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과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맡게 다시 공천을 진행하여 후보 등록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별첨 1: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 더불어민주당 항의서한
- 별첨 2: 더불어민주당 공천부적격자 공천 현황

■ 별첨 1: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 더불어민주당 항의서한

<항의서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불쌍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가객각충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 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 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内外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커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장·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선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곤란한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관위원들이 비례 후보 선수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

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설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합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출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에서의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에서도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도,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3월 23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 별첨 2: 더불어민주당 공천부적격자 공천 현황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_3/3일 발표>

	이름	공천여부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	김현종	낙천	전) 통상교섭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 한미FTA 협상 최종 책임자 - 교섭과정서 부적절 언행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_3/15일 발표>

	이름	공천여부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2	윤종기	공천	전)인천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 제주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 책임자